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 가속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주호영(왼쪽)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국민의당의 국민정책연구원과 바른정당의 비론정책연구소가 26일 공동 토론회를 연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간 정책연대 및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양당 '싱크탱크'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건 이번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대북 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양당이 장기적으로 통합 논의를 이끌어 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정책연대를 이뤄나가

려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5일 바른정당에 따르면 바른정책연구소는 오는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론화 활동 평가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수립의 과제'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학린 단국대학교(분장해결센터 연구위원), 조형규 서울대 교수(한국원자력학회),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할 예정이다.

오늘 양당 싱크탱크 첫 공동 토론회 개최 대북 정책 이견으로 양당 통합 논의 주춤 정책서 한목소리 내며 통합 온기 살릴 전망

사회는 강동호 국민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이 맡고 최홍재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에너지정책 제대로 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한다.

최 부소장은 "두 연구소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공론화 위 활동 평가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을 하자는 취지로 자리 마련하고 내일 토론회가 잘 마무리되면 앞으로 공동 정책연구 등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양당 지도부 차원에서 연대·통합 논의가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동 토론회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정체성 문제로 두 당이 당장 통합을 하긴 어렵지만 이같은 공동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적인 차원에서부터 발을 맞춰나가면 향후 통합 논의의 불고리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함

께 만든 '국민통합포럼'에 참석해 "지금까지 한국정치는 양당 체제에서 국한 대립과 반목을 거듭해온지 만 새로운 국회 환경에서 양당이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 한국 정치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국민통합포럼으로 정리되는 정책에는 적극 협력해서 국회에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정책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의 하태경 최고위원도 여의도 당시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원장장 연석회의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정책연대 속도를 빨리하는 측면에서 양당이 공동정책협의체 구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4당 체제에서 확인됐듯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연대를 하면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며 "우리가 공동정책을 생산해서 대한민국을 이끌면 훨씬 생산적인 20대 국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김윤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을 마치고 대화하며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수훈(왼쪽부터) 주일본대사,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문재인 대통령, 노영민 주중국대사, 조운제 주미국대사.

文대통령 "4강 외교가 우리 외교 기본일 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우리가 앞으로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인도 등으로 다변화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역시 4대국과의 외교가 우리 외교의 기본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4대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서 이렇게 밝힌 뒤, "북핵 미사일이 워낙 엄청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핵문제를 해결,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나이가 동북아 전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4대 국가

미·중·일·러 4개국 대사 신임장 수여식
文 "외교발전 위해 큰 역할 해주길 부탁"

안 관련 "미국은 북핵문제에 대한 양국 간 공조, 한미동맹 강화뿐 아니라 한미 FTA 문제, 남위비 분단 문제 등 난제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도 마찬가지로 북핵 문제 공조와 함께 과거사 정리 문제, 미래 발전적 관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이 부분을 조화스럽게 잘 외교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사드 문제를 넘어 서 양국 관계를 우리 경제 교역에 걸맞게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며 "러시아는 그 전까지는 남·북·러, 이런 삼각 협력의

외교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운제 주(駐)미국 대사, 이수훈 주일본 대사, 노영민 주중국 대사,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등 4명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반도 주변의 4강(強) 외교 중심에서 벗어나 아세안 국가 등으로 외교의 다변화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중·일·러의 기준 4강 외교를 벗어나서는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미국·일본·중국·러시아는 우리 외교에 근간이 되는 나라들이"이라며 "4대국 대사를 모두 특별대사로 임명하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이 아닌가 싶다"며 운을 뗐다.

이어 "4대국이 우리 외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지금의 국면, 그리고 새 정부의 외교 정책의 기조를 세우는 시기란 점에서 (4강 대사들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을 대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각 나라별 중요 현

률 속에서 러시아와 관계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북한과의 관계가 아직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우선 러시아와 여타 가지 협력관계 발전을 그 자체로서 목적을 두고 해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북한까지도 삼각 구도 속으로 끌어들이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임장 수여는 의전 서열에 따라 우윤근·노영민·조운제·이수훈 대사 순으로 이뤄졌다. 각 대사의 배우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여식이 진행됐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전병현 정무수석 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 남관표 안보실 차장,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박수현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인왕실에서 진행된 비공개 환담에서 조운제 주미대사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우리나라와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전 민노총 위원장

"靑 불참 시민들 아쉬워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위원장인 김영훈 정의당 노동본부장은 25일 청와대가 초청한 노동계 정책 간담회 민관이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많은 노동자와 시민이 불참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지금 사회적 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상대를 배려하려는 역지사지와 현재 난관을 타개하려는 강력한 용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노동계와의 만찬 회동을 준비한 청와대를 향해서도 "조직의 대표인 한상균 위원장이 여전히 구속 수감 중이고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이 2년째 수배 중인 상황"이라며 "직무대행이 청와대 민관에 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점을 얼마나 면밀히 배려했는지, 세심한 준비가 있었는지 반문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홍준표 "文대통령, 책임감 있었으면 방미할 필요 없었을 것"

방미 중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현지시간) "민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 분이되면 저희가 굳이 한국의 안보상황을 미국 조야에 알리려 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文대통령 발언, 역할 못한 구한말 고종황제 같은 말씀

백악관 전술핵재배치 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위성던 D.C.에 위치한 한 한국식당에서 열린 '위성던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제1야당이 리도 미국 조야에 한국상황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 왔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문 대통령의 '안보위기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여건이 안 된다'는 발언에 대해 "5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 대통령의 그 발언은 남북 간 긴장이 국토에 달한 시기에 무책임했다"며 "대한제국이 망할 때 러시아·중국·일본 틈 속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구한말 고종황제

와 같은 말씀"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정부 5부 요인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안보위기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홍 대표는 "지금 미국 교민 250만 명이 백악관에 전술핵재배치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미국 청원법에 따라 한 달 내에 10만 명이 청원을 하지 않으면 이 청원은 기각되지만 한 달 내에 10만 명이 넘으면 백악관은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꼭 백악관 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해 10만 명을 채워달라"며 "한국에선 대한민국 국민의 10%에 해당하는 500만 명이 전술핵재배치 요구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뉴시스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재품의 모든 것

광주전남석제품전문

저희 (주)에이치앤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